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 공개를 반대하는 학부모 선언

10월 8일 초등 3학년 진단평가와 10월 14-15일 초등6·중3·고1 학업성취도평가는 획일적 줄세우기 교육이라는 비판에 의해 90년대에 사라진 일제고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원래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해서 실시해 온 평가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국단위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등급제 시행의 자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액 사교육을 시키는 부유층 거주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전국 일제고사 시험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쏟아 붓는 예산이 160억 원인 반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삭감되는 돈은 140억 원입니다. 교육복지 예산을 줄이고 시험만 많이 본다 고 학력격차가 해소되는 것입니까? 일제고사에 드는 예산으로 학습 부진 학생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3월 초 전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제고사 시험에서 경기도 어느 중학교는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장애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을 제외하는 등 비교육적 사례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는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한 반교육적인 부정편법만 성행하게 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제고사 결과 이후 나타날 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대책,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은 전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선택제 확대를 통해 지역 간 학교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상징되는 데, 자칫 이번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 행위가 불필요한 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 조장,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성적공개에 따른 열등학생 낙인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고 올바른 인격 형성과 사람됨을 추구해야 할 학교교육이 무분별한 경쟁과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입시 전쟁터로 전락되는 것은 국민이 원치 않으며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 교과부는 전국단위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존대로 표집평가로 실시하라!
- ▲ 교과부는 학교를 서열화하는 학교별 성적공개를 철회하라!
- ▲ 교과부는 학습부진학생 지원방안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예산을 확충하라!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하는 학부모 일동

